

오피니언

월/요/광/장

임우진



6·2 지방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되면서 입지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아직도 미숙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행정 현장과 중앙에서 정책을 다루어온 입장에서,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해 보고,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과 차별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필자가 보기에는 먼저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전반적인 대민 서비스의 향상, 주민의 참여 확대 등의 성과와 단체장들의 열정적인 지역발전 노력과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와 각종 부패 비리의 만연, 세력 확보를 위한 편 가르기와 출세우기로 인한 지역의 분열과 갈등, 인기 선심행정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들의 타락상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기초단체장 전체의 44%인 102명이 비리 등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고, 이 중 42

명이 중도에 하차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22명의 기초단체장 중 9명이라는 가장 높은 중도하차 비율(41%)을 보였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가. 더불어 그동안 드러난 사례들은 곡히 일부에 불과하고 드러나지 않은 훨씬 많은 부정, 타락, 낭비 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이해는 같다.

못도 단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많은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개선·발전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걱정과 분노만 할 뿐, 선거를 통해 올바로 심판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역 사회의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취업난, 경제난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스트레스, 타락한 정치에 대한 실망, 혐오감 때문에 지방선거에 관심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같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누

며, 이번 선거의 중요한 정책적 쟁점, 후보자의 자격과 선택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공론에 부쳐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종양 지방 어디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역의 잠입꾼을 뽑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기획특집, 캠페인 등은 실종되고, 대신 아전인수적 여론조사와 일방적 흥보와 지지운동, 정당공천을 둘러싼 다툼만이 선거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양상이다.

주민여론이 무시되는 공천, 모든 것을 유권자에게만 맡기고 건전한 여론 형성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모두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행정, 시민사회단체, 언론, 학계 등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각 정당에서도 기득권 지키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천방법과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화의 성지이고 근대사를 개척해온 우리 호남에서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치와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일까.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결과 야기되는 지역발전의 지체와, 혼란 갈등이 얼마나 큰 지역적 순실인지를 깨닫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소중한 이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다. 남은 두 달여 동안 자치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선거, 바로 우리의 일이다

공직을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삼고 개인·신선행정을 일삼는 제왕적 권력 아래 충성경쟁에 내몰린 공무원과 분열된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청렴과 열정적인 봉사, 소통과 화합, 지역 역량의 결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남편이나 형이 유죄판결로 자리를 잃자 부인이나 동생이나 와서 당선된 사례, 비리로 본인이나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나서는 사례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곁에 드러난 잘

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우리의 일이다.

사람들은 정치를 탓하지만 정치는 주민의식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의식은 단시일 내에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부터 성숙된 주민의식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적 노력을 함께하여 한다. 민주주의의 훌륭한 선거과정에서의 노력을 특히 중요하다.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난 4년의 지방자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4년의 지역적 과제를 도출하

시설

위기의 지방건설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건가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또 다른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삼능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절차를 밟는 등 지역 건설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 지역건설업체의 시작이다. 여기에다 행정권이 올해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더 엄격하게 하는 등 부실업체 구조조정에 고삐를 훨씬 치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 시공능력 평가 35위이자 광주·전남 2위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주·전남 지역 100여 개에 달하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한 전망이다. 또한 광주지역 4천 633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입주 예정자와 공동도급사의 그리고 작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남양건설이 지역에서 진행중인 각종 공공시설 공사의 차질도 예상된다.

문제는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삼능이나 남양건설로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

천안함 인양·조사위 활동 의혹 푸는 계기로

천안함 인양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실종자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합체를 인양해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어제부터 구조·수색작업이 인양작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거센 조류와 악천후 등으로 인양 작업 역시 실종자 구조 작업 못지 않게 쉽지 않은 일이다. 침몰한 합체에 잠수부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쇠사슬을 감은 뒤 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양 작업이 이달 말이나 또는 다음달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단시간 내에 인양을 마쳐야 한다. 인양 주체는 민간업체가 되고 해군이 인양작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민간업체의 장비 동원이나 인력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합체 인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사고 발생 열흘이 되도록 원인이 풀려지기는커녕 각종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의 거듭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합체의 신속한 인양이 이뤄져야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관 합동조사단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철저하게 조사를 벌여 침몰 원인이나 대응조치 등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았던 대목들을 명쾌하게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사고 원인은 물론 우리의 안보 태세에 구멍은 없는지 책임규명과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있 어선 안 된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 천안함 침몰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제는 진실이 무엇인지 차분히 접근할 때다.

無等鼓

최초의 신시사이저(synthesizer)는 1924년 고주파 발진기의 간섭에 의해 생기는 소리를 이용해 만든 테레민(theremin)이다. 발명자인 러시아 물리학자 레온 테레민의 이름을 냈다. 20여년 뒤 그는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도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첨보전 장비를 개발했다. 무선주파수인식 기술인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의 힘이다.

RFID에는 전자태그와 판독기로 동작한다. 바코드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빛 대신 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스템인 '하이패스'와 교통카드

도 오는 9월까지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내업체들이 개발한 통합 위치인식 및 첨보(muster) 시스템은 해상의 석유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실종 승조원들이 RFID 장치가 부착된 라이프 재킷만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이 장비가 도입됐더라면 '시간과의 싸움'인 실종자 위치 파악과 구조가 더 원활했을 것이다.

기억을 쓰기 위해 헌신하는 미군 합동의 승조원 대부분은 이 재킷을 착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뒤늦게 해군 승조원에게 RFID 재킷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군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작용 분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제약사는 의약품의 유통이력 추적을 위해 2015년까지 5천억원을 투입해 전자태그를 붙이기로 했다. 진도군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論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8005>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조사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사 진 부 2200-691	디자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5 <F A X 222-4267>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특별기고

박광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민선 3기, 4기의 8년 동안 시장을 이끌면서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광주를 살기 좋은 도시, 부자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그것이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8년은 둘이켜보면서 아쉬움도 남지만 성취한 부분에 대한 보람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동안 경제·문화·환경·복지·세계화 등 각 분야에서 광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낸 산업단지에는 활동이 넘쳤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만년 소비도시인 광주는 100억 달러 수출도시로 탈바꿈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이끌어 내 광주가 문화 수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1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광주전 살리기, 증심사지구 환경복원사업 등을 통해 광주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맑아졌다. 최근 광주천에 나타난 수달은 또 다른 광주 성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15년까지 앞에 열거한 분야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2020년에는 광주가 1등 도시로 우뚝 서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첫째, R&D 특구의 완성이었다. 그동안 90여 개의 연구기관 클러스터, 산업집적화단지, LED밸리 등 인프라를 구축해 연

구개발특구 요건을 갖췄다. 그 결과 첨단, 하남, 진곡산업단지와 장성군 일원 5천2백만m²를 특구로 지정해 2026년까지 1조 145억원이 투입된다. 광주는 미래 아시아의 '사이언스 파크'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 연구기능의 강화, 대학의 인재양성, 기업의 경영혁신, 행정지원시스템 간소화와 적극성, 정치권의 기업지원과 보호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지역건설업체들이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일수록 정치권이나 학계 등 온 지역이 하나로 뭉쳐 금융권의 긴급 자금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이 대회는 국제도시로의 광주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행사다. 따라서 각종 경기장을 비롯한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 시민이 나서는 자원봉사 시스템, 토역여원의 양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U대회 역사상 길이 남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신(新) 광주 메트로폴리탄의 완성이다. 나주 혁신도시와 화순과의 경전철을 연결하고 제3순환도로의 연결을 통해 인구 200만 명의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해야 한다. 도시는 막힌 부문이 없이 잘 돌아가는 신경계처럼 구성돼야 할 기관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관광도시로의 성장이 필요하다. 관광분야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다. 연간 5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프랑스, 스페인,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특히 광주는 이 분야에서 너무 취약하다. 어 등산 관광단지에 이어 새로 추진 중인 서구 서창동 일원의 관광레저복합타운을 차질 없이 완성하면 광주는 21세기 호남의 관광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를 두렵게 맞이하면 한없이 어려운 일이다. 행정은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주는 것이다.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불굴의 자세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2015년 하계 U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 등을 이끌어내는 등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 중심도시 사업의 성공이다. 그동안 랜드 마크 논란과 옛 도청별관 철거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문화전당에 채울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시민 지원단이 구성됐으나, 문화관공부와 월활한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광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불굴의 자세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편, 정부의 지방세 지원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낭비와 과다한 세무대리인의 직접적인 부과는 예상된다. 이를 예상해 예산을 축소하고, 세무대리인의 부과를 줄여야 한다.